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북핵은 압박한 위협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협력하여 평화적 해결의 지혜가 요구된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듯하다.

지난 4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논쟁에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났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중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주장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대북 원유 지원 중단을 강력히 제기했다. 중국

북핵 해법, 단계적·포괄적 접근

은 미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핵 개발의 원인이고 압박 제재 일변도가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북미 간의 쌍중단(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양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제시했다.

원유는 북한의 생명줄이다. 산업 전력용, 군대 훈련용, 주민 왕래 수단용이다. 중국은 3회 정도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중단 사례가 있다.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일주일에 보름 정도 중단했다. 북한에는 고통을 주지 못했다. 중국이 대북 원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을 포위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내세워 중국을 포위한다고 느끼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다. 중국은 경제·금융을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G2 국가이다. 미중 간의 연간 교역액은 6200억 달러를 상회한다.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은 양국 모두 거대한 손실을 수반한다. 경제적 선택에 능통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손실을 감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제기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 도음보다 손실이 크다면 의미가 없다. 첫째, 전술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 둘째, 전술핵이 있어도 우리가 운용할 수가 없다. 셋째, 한반도 핵우산을 약속한 미국에 대해 불신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군비 경쟁에 의해 한 반도가 화약고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으로 제2의 사드화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서 독자 핵무장의 주장도 있다. 수령 독재국가로서 연일 고난의 행군을 하는 제2의 북한화를 각오하면 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 사회의 제재는 피할 수 없다. 핵무기는 도미노 현상이 강하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일본과 대만의 핵 보유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국·일본·대만이 핵을 가지면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진다. 미국이 한국의 핵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북한 핵 문제는 1989년 프랑스 삼입위성 SPOT-2가 촬영한 영변 핵시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오늘날 북한 핵의 고도화를 보고 28년 동안 대화·제재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나친 결과론적 해석이다. 1994년 북미 간에 북핵 동결의 제네바 합

의가 있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토대한 북핵 동결의 2·13 합의, 북핵 불능화의 10·3 합의가 있었다. 2008년 12월 6 자회담이 전면 중단된 후 북한은 5회의 핵실험과 6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대화 중에는 북핵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대결 중에는 북핵 고도화로 나아감을 보여 준다. 북핵 문제의 고정론적 해석에 해법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포괄적 접근은 과정론적 해석에 토대한다. 현재 핵의 동결, 미래 핵의 해체, 과거 핵의 폐기가 단계론이다. 비핵화·관계정상화·평화협정 등의 연계가 포괄적 접근이다. 비핵화와 평화 체제는 합의·이행·검증·새로운 합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진전한다. 시간·인내·비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는 대화와 압박의 병행 전략이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의 모습은 보이지만 대화의 목소리는 없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북미 대화·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위기 속 대화의 출발점은 물밑 접촉이다. 물밑 접촉은 협상의 ABC이다.

종교칼럼



변 찬석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정사목

일곱 가지 사회악

‘희생 없는 신앙’이다.

첫 번째 사회악은 ‘원칙 없는 정치’이다. 정치를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한 가정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국가를 다스리는데 원칙이 없으면 그 국가가 어떻게 바르게 가겠는가?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 없는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 따라서 원칙없는 정치는 사회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칙 없는 정치를 해서 사회악이 되어버렸다. 정치인들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이야기 하지만, 단순히 구호에 지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이 없는 정치를 하다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워 악이 되어버렸다. 정치의 원칙 기준은 헌법이다. 그런데 그 헌법 위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무슨 원칙 있는 정치가 되겠는가?

두 번째 사회악은 ‘노동 없는 부’이다. 노동 없이 부를 누리는 것은 사회악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부를 누리는 것이다. 부모가 물려준 60억 원을 20여년 만에 7조 원 이상으로 불리는 ‘요술’이 가능한가? 매일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자보다 부동산 사 매매를 통해 더 많은 부가 주어지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 국민들이 맡겨준 권한을 국민들이 아닌 자신의 부를 쌓는

데 쓰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 없는 부는 사회를 망가트리는 사회악이다.

세 번째 사회악은 ‘양심 없는 쾌락’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쾌락을 추구하면 사회악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그런 사회악을 없애야 국가와 사회가 병이 들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쾌락이 오히려도 정당한 것은 누리지만 부당한 것은 누려서는 안된다.

네 번째 사회악은 ‘인격 없는 교육’이다. 한 사회가 교육을 시키면서 전인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 따로, 인격 따로 그런 것이다. 그런 교육은 사회악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교는 취업을 위한 스펙 쌓는 도구로 전락한 나머지 중고등 교육은 대학교 입시를 위한 교육이 되었고, 취업률이 좋은 대학만 장려를 하다보니 인문학부는 줄어지고 취업에 유리한 공학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니 인문학은 점점 사라지고 취업기술만 남게 되었다.

다섯 번째 사회악은 ‘도덕성 없는 상거래’이다. 거래를 하면서도 도덕성이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이다. 힘과 자본을 바탕으로 원정과 허청의 부도덕한 갑을관계나,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장악은 사회악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수단 이익을 얻고,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니 이것이 바로 도덕성 없는 상거래인 사회악이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사회악은 ‘인간성 없는 과학’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윤리는 과학의 발달 속도에 따르지 못하면서 과학명명 안에서 인간성은 날로 쇠퇴해지고 있다. 과학명명은 발달했지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간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보다는 돈과 권력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가슴이 살균제 문제, 살충제 계란 안에서 인간성은 날로 쇠퇴해지고 있다. 과학명명은 발달했지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간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보다는 돈과 권력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가슴이 살균제 문제, 살충제 계란 안에서 인간성은 날로 쇠퇴해지고 있다. 과학명명은 발달했지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간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보다는 돈과 권력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회악은 ‘희생 없는 신앙’이다. 아마도 신앙인이라면 간디가 말한 일곱 가지 사회악중에 ‘희생 없는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버림과 포기’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교가 도리어 하느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임오로만 신앙하지 말라는 것이다. 임오로만 하는 신앙은 사회악이고 자기만 하는 신앙은 사회악이라는 것이다.

기 고



박 순길
남부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이제는 교육의 질이다

불가능한 시대’의 답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그러한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교육적 만족을 주고는 있을까? 어떤 교육이 미래에도 잘 적응 가능한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 미국의 흐름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도 몇 번 바뀌었다. 기능주의 시대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물건이 최고로 인정받았고, 교육도 행동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구성주의 시대에는 소량 생산, 핸드메이드 제품이 인정을 받았고, 교육도 인본주의 관점으로 변화가 있었다.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변한다는 사고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변한다는 시대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동하였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관점이 보살과 체벌로 가능하다는 것에서 개인의 내적 동기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

지금의 개인의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아닌 ‘더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로 관심을 바꾸어야 할 때인 것이다. 교육의 질이란? 혹은 질적인 교육이란? 교육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육에서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 개인을 ‘있는’ 그대로

로 바라보고, 그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에서 만족을 얻는다.

한 개인이 ‘원하는 교육’은 맞춤형 교육이고, 이러한 교육적 관점은 이미 진행형이다. 다만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학교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질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대안은 필수적이다.

특수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의 질적인 교육을 위해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법적 학급당 학생수가 유지원은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법적 노력은 특수교육대상자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교육을 위한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장애유형이 같고, 장애정도가 같아도 각 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적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 정도가 중·중복화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더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지

금보다 더 잘 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자신이 잘 하는 것을 할 때 행복감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이 가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늘 진리 같고 당연한 것 같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실천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교육에서도 교육의 대상을 위한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피교육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의 내용이라면 결과도 분명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우리 후세대들에게 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교육도 자산이다. 교육의 틀이 튼튼해야 혼란스럽지 않게 배울 것이고, 그 교육의 효과가 오래갈 것이다.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고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의 프레임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불안이 해소되면서 행복을 느낀다.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진다.

社說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 강화 제공모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에 대해 방향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단계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오늘이지만,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공공성 강화와 환경성 고려 등을 골자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애초 1단계 사업은 이미 수개월간 추진해 온 만큼 공모안 심사 위주의 기존안대로 진행하고, 2단계 사업부터 국토부의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은 수랑·송암·봉산·마루 공원으로 이들 공원 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오는 마감, 오는 10~11월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기존 특례사업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환경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윤리사관들이 부분별하게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1단계 사업 심사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한

업체보다 공원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공원 땅을 가진 사업자들끼리 연합하거나 수십억 원짜리 토지를 넘기는 대가로 공사나 지분을 보장받는 등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녹지 보존보다는 투자비 회수를 위한 숲 속 고층아파트 건설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정부가 이미 개선안을 내놓은 만큼 광주시는 1단계 사업부터 개선안을 적용해 제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의 신뢰성 훼손이 걱정된다면 일단 진행 절차(일정)를 연기하거나 제안서 심사 시 공공성·환경성 확보 여부를 따져 제안서를 반려하면 된다.

정부의 개선안을 따르는 것이 향후 중앙공원 등의 국가공원 지정 시 유리하다는 점도 염두에 뒀야 한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수차례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녹지의 최대 보존을 강조한 만큼 해당 부서가 기존안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6일 대장정에 들어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미래 들’(FUTURES)이라는 주제로 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열린다. 어제 오후 개막식을 산호탄으로 4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는 영국·이탈리아·프랑스·미국·중국·베트남 등 34개 국가에서 디자인 등 500여 명과 37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천300여 종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4개의 본전시를 비롯해 특별전(3개), 개막 심포지엄과 국제 학술대회, 비즈니스 프로그램, 특별 프로젝트, 이벤트 등 다양하게 꾸며졌다.

본전시는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제안하는 4개 주제의 전시로 오래된 미래(Futures of the Past), 미래를 디자인하자(Design! the Future), 미래를 창업하자(Startup the Future), 아시아-그 미래(ASIA_The Future)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전도 다양하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는 ‘한국의 디자인, 혁신으로 거듭나다’(Becoming Innovators) 전시가 11일까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4차 미디어아트’ 전시가 11월 5일까지 이어진다. 또 신안군 중도면 태평염전 소금박물관에서는 자연 속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25 Hours(자연과 미래)’ 전시 열린다.

올해 비엔날레는 문화적 측면보다는 산업화에 좀 더 방점을 둔 게 특징이라고 한다. 특히 작가들의 ‘완성품’을 일괄적으로 전시하던 데서 벗어나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가 많다. 따라서 관람 시간을 넉넉히 갖고 관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정동훈 총감독의 말처럼 이번 행사를 즐겁게 구경하는 동안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은 또 하나의 답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5·18 첫 발표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50분 게임동 광주교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시위대에 포위된 장갑차의 무경이 열리고 M16 총구가 나오더니 군인 한명이 고개를 내밀고 총을 발사해 조대부고 학생이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다.

두 번째 발표는 20일 오후 11~12시 광주역 앞. 3공수여단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표해 5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냈다. 최근 공개된 ‘전남대 주둔 병력에 실

로 무장하고 벌인 소위 ‘도청소탕 작전’은 발표 명령 없이는 불가능했다. 5·18 과정에서 계엄군은 실탄 51만2626발, 수류탄 194발, 대전차로켓탄 ‘66mm로우’ 50발을 사용했다.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장을 치르듯 광주를 유린했지만 발표 명령자는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국방부가 ‘5·18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군명은 그동안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

발표명령자

지 않았던 자료까지 모두 찾아내서 조사하겠다고 며 전 군에 ‘5·18 자료 폐기 금지’

를 명령하기 바로 이 부대다.

세 번째 발표는 충격적인 도청 앞 집단 발표. 21일 오후 1시 11공수여단이 무릎꿇, 서서와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헬기에서는 전일빌딩을 향해 기총소사를 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장면으로 나오는 이날 집단 발표에 희생자가 50여 명,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한다.

이후 곳곳에서 시민을 향한 발표가 이어졌다. 계엄군은 27일 새벽 삼부중

정작전을 시작했다. 3공수여단 특공조 77명이 1인당 실탄 140발과 수류탄으

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140명 이상

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곳곳에서 시민을 향한 발표가 이어졌다. 계엄군은 27일 새벽 삼부중 정작전을 시작했다. 3공수여단 특공조 77명이 1인당 실탄 140발과 수류탄으

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140명 이상

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곳곳에서 시민을 향한 발표가 이어졌다. 계엄군은 27일 새벽 삼부중 정작전을 시작했다. 3공수여단 특공조 77명이 1인당 실탄 140발과 수류탄으

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140명 이상

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곳곳에서 시민을 향한 발표가 이어졌다. 계엄군은 27일 새벽 삼부중 정작전을 시작했다. 3공수여단 특공조 77명이 1인당 실탄 140발과 수류탄으

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140명 이상

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곳곳에서 시민을 향한 발표가 이어졌다. 계엄군은 27일 새벽 삼부중 정작전을 시작했다. 3공수여단 특공조 77명이 1인당 실탄 140발과 수류탄으

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140명 이상

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곳곳에서 시민을 향한 발표가 이어졌다. 계엄군은 27일 새벽 삼부중 정작전을 시작했다. 3공수여단 특공조 77명이 1인당 실탄 140발과 수류탄으

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140명 이상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민신문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